

KBS 사면초가...수신료 분리징수 강행만이 답일까

43년째 月2500원 TV 있는 가정 전기요금 포함 시청자들 유튜브·OTT 등 옮겨가 '이중 부담' 수신료 분리시 KBS 재정적 타격 불가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 반부터 여야 공세를 받았지만,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부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국민제안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 점을 차차 하더라도, KBS를 향한 여론이 부정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신중한 논의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공영방송 존폐 위기만 자초할 수 있다.

◇국민제안 오류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TV가 있는 가정은 전기요금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일괄 징수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시청자들이 TV에서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TV(IPTV)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요금을 이중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주제를 올리고 의견을 들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KBS는 이번 국민제안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제안은 동일한 중복 투표가 가능하고, 정당 차원 투표 독려 등이 이뤄진 만큼 여론 수렴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수신료를 둘러싼 국민들의 오해가 적지 않은데,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보다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없이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돌려주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KBS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 자체가 문제"라며



지난 2021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경쟁감사에서 정승일(가운데) 한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TV수신료 징수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없는 사례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공영방송 흔들

수신료 분리징수 시 KBS는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S 연간 운영비는 약 1조4000억원~1조5000억원이며, 이중 수신료 비중은 45% 내외다. KBS 수신료는 43년째 2500원으로 동결 돼 있으며,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수준이다. 독일 연간 수신료 220유로(31만5605원), 영국 159파운드(26만1157원), 일본 1만4700엔(14만5502원)의 5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하다. 유럽방송연맹에 가입한 56개국 중 23개국이 수신료를 유지하고 있고, 이중 50% 이상인 12개국은 전력회사가 수신료 징수하거나 감당했다. 무엇보다 분리 징수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 추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일괄 징수하고 있는데, 분리 징수 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영방송 사업이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이 악화되면, 당장 글로벌 미디어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KBS를 포함해 지상파 규제는 많지만, 넷플릭스 등 OTT는 별도 규제없이 시장에 들어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KBS 자산을 활용해도 OTT와 경쟁해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

◇제도 개선 뒷받침

KBS는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동안 방만 경영과 보도·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시청자 불만이 누적 돼 수신료 분리 찬성이

로 이어진 면도 없지 않다. 대하사극과 다큐멘터리, 클래식 프로그램, 국제·대외·장애인 방송 등으로 공영방송 역할을 강조했지만, 점점 시청자 채널 선택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KBS 드라마는 몇 년째 부진을 거듭, 수목극을 폐지한 상태다. KBS 2TV 주말극은 40% 이상을 찍어 시청률 효과로 불렸지만, 백진희 주연 '진짜가 나타났다!'는 16%대까지 떨어졌다. KBS는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편성을 고려했지만, 막대한 제작비(약 150억원)를 부담스러워 해 놓친 뒤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공영방송으로서 가치·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케이블채널·OTT 등과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MBC·SBS 역시 지상파 위기를 맞았지만,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국내외 OTT와 손을 잡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점과 비교됐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는 세계적으로 거론되는 추세다. 미디어환경 변화 속 수신료 분리징수를 성급하게 시행하기 보다, 1987년 제정된 방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인상에도 부정적인 만큼, 공영방송 신뢰도를 회복하고 인식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KBS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유럽 27개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자체 이슈보다, 우리 미디어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등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계보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경구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진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